

## 상징공간의 변용과 집합기억의 발명: 서울의 식민지 경험과 민족적 장소성의 재구성

Modification of Symbolic Spaces and Invention of Collective Memories:  
How the national places in Seoul were reconstructed  
through the colonial experiences?

김백영\*

1995년 구(舊)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와 1998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개관은 일제 식민통치의 기억이 오늘날 서울의 공간정치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사례에서 우리는 해방 이후 한국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토대를 둔 상징공간의 파괴와 복원에 따른 집합기억의 말소 및 재생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일제하 서울의 도시공간 재편 양상을 세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집합적 피해의식에 근거해 일제가 남긴 공간적 유산을 해석하는 유력한 통념적 속설인 일제 단맥설의 허와 실을 규명해냈다.

우선 일제의 식민도시화 전략은 원형의 이식과 전통의 파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적으로 구분된다. 그들이 식민지에 이식한 독특한 일본적 근대도시의 공간적 원형은 바쿠후 시대 조카마치의 공간질서에 뿌리를 둔 것으로, 신사와 유곽 등 일본 고유의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식민화 초기 경성에서 그들이 정력적으로 추진한 기념비적 양대 상징건축은 경복궁의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남산의 조선신궁으로 대표되는데, 그 건설전략은 탁 트인 전망과 압도적인 외관 등 시각효과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는 경성부의 오스망화 전략으로 요약된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의 상징건축에 대한 식민권력의 태도는 ‘고건축’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사사회학, 도시사회학, 문화사회학(rangzang@naver.com)

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무시와 특정 상징공간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라는 양면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 결과 그들의 공간정치는 임기응변의 무원칙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전반적으로 피식민 대중의 민족적 반감을 회피하고자 했던 식민권력의 공간정치의 실상이 풍수적 단맥설과 같은 악의적이고 치밀한 민족말살과 공간파괴의 전략으로 대중적으로 왜곡되어 인지된 것은 해방 이후 한국 민족주의가 걸어온 집합적 복수의 정서를 반영한다. 최근 진행되어온 민족적 장소성의 재발견은 공간의 탈식민화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일제 단맥설 같은 대중정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어: 서울(경성), 상징공간, 집합기억, 식민지 경험, 민족적 장소성

## 1. 서론: 공간의 파괴와 복원, 기억의 말소와 재생

1995년 8월 15일, 광화문 거리에서 거행된 광복 50주년 기념식에서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높이 4.5m의 중앙돛 첩탑 철거와 함께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인 구(舊)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 작업이 있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 청사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는 중앙청(Capitol Hall)으로, 1983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20세기 한국사의 영욕의 중심에 있었던 이 건물은 일제에 의해 건설된 조선총독부 청사였다는 사실만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즉각 제거되고 말소되어야 할 민족사의 흉물로 규정되어 첩탑만을 유물로 남긴 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sup>1)</sup>

조선총독부 철거공사는 1993년 들어선 문민정부(1993~1998)에 의해 대대적으로 전개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sup>2)</sup>

- 1) 구 총독부 청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2009년 완공 예정으로 경복궁 복원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 2) 1997년 12월 발행된 『변화와 개혁: 김영삼 정부 국정 5년 자료집』(전 4권) 가운데 제1권(정치편) 제3장(역사 바로 세우기) 제2절에 ‘옛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경복궁 복원’ 항목이 있다.

당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 계획을 들 수 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서울구치소로 쓰이던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시설을 이전했는데, 그 직후인 1988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1992년 8월 15일 공간의 일부를 공원화해 서대문 독립공원이 개원했다. 1995년 성역화 사업은 이곳에 독립관과 일부 감옥 시설들의 원형을 ‘복원’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1998년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동일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지만 위의 두 사례는 일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을 띤 두 시설물에 대해 한국 정부가 행한 전혀 다른 방식의 개조 양상을 보여준다. 전자가 일제가 만든 건물을 흔적도 없이 파괴함으로써 그 자리에 남겨진 식민지기의 흔적을 지우고 과거 왕조시대의 공간을 복원해 덧씌운 경우라면, 후자는 이미 공원화 과정에서 훼손되었던 일부 시설물의 원형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부각시켜 기념함으로써 오랫동안 망각되어온 식민지기의 장소성을 되살려낸 경우이다. 이 대조적인 두 가지 변화를 각각 공간의 파괴를 통한 기억의 말소와 공간의 복원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두 공간이 경험한 역사의 전 과정에 비춰볼 때 두 가지 방식 모두 균형 잡힌 기억과 기념의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구 조선총독부 청사는 1926년 완공 이래 1945년까지 약 20년간의 ‘오욕(汚辱)의 역사’로만 그 의미가 규정되면서 파괴의 민족사적 정당성이 강변되었다. 이 공간이 1948년 8·15 정부수립 선포식을 비롯해 9·28 서울 수복, 4·19혁명, 5·16쿠데타, 12·12쿠데타 등 20세기 후반기 40여 년간 한국사의 정치적 격동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적 현상이었다는 사실은 ‘일제의 상징물’이라는 지배적 기표에 묻히고 말았다. 해방 이후 파란만장했던 한국현대사의 현상으로서 그 건물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더라면 이 건물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서대문 독립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강우규 의사 가짜 유폐 소동<sup>3)</sup>을

들지 않더라도 이곳의 역사성에 대한 소개가 지나치게 일제시기에 편중되어 있음은 현장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 공간은 1908년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최신 규모’의 목조건물로 지어진 경성감옥(京城監獄)에서 출발해<sup>4)</sup> 1912년에는 서대문감옥, 1923년에는 서대문형무소가 되었고, 해방 이후인 1946년에는 경성형무소, 1950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1967년 서울구치소로 명칭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이 공간은 유관순, 윤봉길, 강우규 등의 독립 운동가들을 포함해 1908~45년간 연인원 약 50만 명의 투옥자와 약 1,500명의 순국자들이 거쳐간 민족사적 수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4·19혁명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숭한 민주화 운동가들의 고통이 담긴 공간이기도 하다. 그밖에 각종 범법행위로 국가권력에 의한 처벌을 경험한 각양각색의 개인사적 불행과 참회의 장소이기도 하다.<sup>5)</sup>

어떤 장소를 기념한다는 것, 특정 공간을 역사기념물로 만든다는 것이 그 공간에 담긴 모든 역사의 재현을 의미할 수는 없다. 역사적 공간의 ‘복원’을 위해서는 언제나 특정 시기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일제 시기에서 연원한 공간적 유산을 대할 때 지나치게 반일 민족주의적인 집합 정서에 휩싸여 상식과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정운현, 1995, 194쪽 참조.

4) 경성감옥의 역사적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한말의 전옥서(典獄署)에서 비롯되어 1904년에는 경무청감옥서(警務廳監獄署)로 바뀌었다가 1908년 무악재로 이전하면서 최초의 대규모 근대적 감옥으로 신축되었다.

5)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의 공간적 인접성을 활용해 이 일대를 ‘독립공원’으로 이름붙인 방식도 두 공간의 역사성을 생각해보면 적절한 방식은 아니다. 한국 민족주의에 의한 독립문의 역사적 의미의 왜곡과 굴절의 양상에 대한 논의로는 쿤 퀴스테르(Koen De Ceuster, 2000) 참조.

## 2. 일제 단맥설의 허구와 진실

일제 시기의 공간적 유산에 대한 대중적 오해의 소산 가운데 벌써 수십여 년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른바 일제에 의한 풍수단맥설은 학술적 검증은 거치지 않은 매우 속화된 성격을 띤 것이지만 동시에 매우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대중 정서와 민족 감정의 형성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온 담론이다. 전국 각지의 명산에 일제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쇠말뚝 만행’으로 대표되는 일제 단맥설은 일제가 조선의 전통적 풍수 사상을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악의적으로 활용했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6)</sup>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내(구 경성부 내)로 한정해놓고 볼 때 일제 단맥설의 내용은 분석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일제가 전통 한국사회의 공간질서를 —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면적으로 — 부정하고 말살하는 새로운 공간질서를 도입·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은 풍수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통적 공간질서에 대한 철저하고도 의도적인 파괴와 유린으로 특징지어진다. 서울의 주위를 두른 성벽을 철거하고 사대문을 모두 철거함으로써 성곽도시의 원형을 훼손하려고 획책한 것을 비롯해 백운대(북한산 정상)에 쇠말뚝을 박고 총독부 청사를 육중한 석조 건물로 근정전 앞에 신축하고 창경궁에 일본풍 건물로 장서각을 짓고 사직단을 공원화한 것, 창경궁과 종묘의 허리를 끊어 신작로를 낸 것들은 모두 이러한 의도의 소산으로 해석된다.

둘째, 일제가 건설한 랜드마크 건축물들은 전통질서의 파괴와 식민권력의 각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극히 계획적이고 의도

6) 일제 단맥설의 외연과 내포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기 한반도에서 일제에 의해 행해진 공간적 실천을 ‘민족말살’의 악의적 의도의 산물로 해석하는 광범위한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일제 단맥설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정운현(1995: 243~248), 개괄적인 소개는 노자키 미즈히코(2000) 등 참조. 그밖에 《한국일보》, 1993년 9월 14일자, 《문화일보》, 1995년 3월 6일자 등의 신문기사도 참조.

적으로 그 위치와 형태가 결정되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총독부 청사와 경성부 청사의 입지와 형태는 서울 시내 한가운데 ‘대일본(大日本)’이라는 형상을 각인시키고 각각 경복궁과 덕수궁의 위세를 누르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혼의 상징인 조선신궁은 조선의 호국신전격인 국사당(國師堂)이 있던 남산을 깎아 건설했다. 신마찌(新馬) 유곽을 장충단 앞에 배치한 것이나 장충단에 벚꽃을 심어 일본인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고 박문사(博文社)를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셋째, 일제가 조선왕조의 상징물을 비롯한 한반도의 전통적 문화유산에 대해 철저하게 계획적인 파괴와 약탈행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환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을 세운 것, ‘5보에 1루 10보에 1각’으로 표현될 만큼 대소 전각들이 고기비늘처럼 뻗뻗이 들어서 있던 경복궁을 무참히 ‘난도질’한 것,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창경원으로 격하시킨 것, 경희궁의 전각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경성중학교를 설립하고 부속건물과 궁터 일부를 매각한 것,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격하시키고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 등 그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상의 주장들은 TV, 신문, 잡지, 서적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되어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속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이를 입증하는 충분한 문헌적 근거가 제시된 사례도 거의 없다.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이러한 속설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개별 건축물이나 공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 성과가 적지 않지만, 이틀 포괄하는 일제의 공간 재편 전략이나 정치적 의도, 전략의 구체적 목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 이후 반세기 이상을 경과하면서 명확한 학술적

7) 예컨대 조선총독부 청사 건설에 대해서는 손정목(1990), 허영섭(1996), 경성부 청사 건설에 대해서는 손정목(1990), 독립문 건립에 대해서는 신용하(1999), 조선신궁 건설에 대해서는 김대호(2003) 등의 연구가 있다.

연구의 부재와 광범위한 대중적 의문의 공백지대에 민족주의적 피해의식을 호소해 일제의 공간적 실천을 악의적이고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일제 단맥설’과 ‘풍수모략설’ 같은 담론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자리를 잡게 되었다. 최근 해외 한국학자들 중에는 일제 식민지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러한 대중적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을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연구가 등장하는가 하면,<sup>8)</sup> 일본인 연구자들 중에는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 전략과 관련해 새로 발굴해낸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의 사실을 밝혀내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연구의 진전도 있었다.<sup>9)</sup>

이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위에서 제기한 세 가지 통념적 가정의 허와 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세 가지 통설을 다음 세 가지 연구문제로 치환해 이를 중심으로 일제 단맥설의 허상과 실상을 일제하 서울의 도시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규명해볼 것이다. 첫째, 일본이 식민지 도시공간에 도입하고자 한 새로운 공간적 질서는 어떤 성격을 띤 것인가? 둘째, 식민권력의 주요한 상징 건축의 입지와 형태를 결정한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일제가 한반도 전통문화의 유산에 대해 취한 태도는 어떤 특성을 띠는가?

### 3. 원형의 이식과 전통의 파괴

분석적으로 볼 때 일제가 한국의 전통적 공간질서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새로운 공간질서를 도입·적용했다는 주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전통적·토착적 공간질서의 부정·말살·파괴와 관련된 것

8) 허(Hur, 1998)의 논문, 취스테르(Ceuster, 2000)의 연구, 노자키 미즈히코(2000)의 저서 참조.

9)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총독부의 경성부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五島寧, 1996)와 『조선신궁을 포함한 제국 일본의 식민지 신사 건설계획에 대해 연구』(靑井哲人, 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공간질서의 도입·이식·적용과 관련된 것이다. 통치기반이 취약한 외래 식민권력의 입장에서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된 것은 피식민 대중의 즉각적 반발을 야기할 전자의 측면보다는 자신들이 구축한 새로운 권력질서를 조속히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후자의 측면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 순서상 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놓고 전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연 일본이 식민지 도시공간에 도입(하고자)한 새로운 공간적 질서는 어떤 성격을 띤 것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본국과 다른 식민지에서 전통적 공간질서를 어떻게 근대화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조카마치(城下町)와 일본형 근대도시 모델의 형성

메이지유신에 대한 통념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사에서 근대는 전통과의 단절보다는 그 연속과 계승의 측면을 강하게 띤다. 특히 근세 바쿠후 사회의 오랜 전통적 공간질서의 관성이 강하게 작동한 도시공간의 경우 이러한 연속성은 더욱 강조해 인식될 필요가 있다(김백영, 2003). 메이지정권은 근세 일본을 지배해온 바쿠한(幕藩) 체제하의 300여 개의 독립적인 지방권력체들을 장악해야 했다. 이는 각 지방 다이묘(大名)들의 공간적 거점인 지방도시들을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고 배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국토계획의 논리에 따라 재질서화하는 작업을 필요로 했다. 이는 지방도시들을 지배해온 전통적인 조카마치(城下町)의 공간질서를 근대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었다.

조카마치의 공간질서는 일반적으로 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이묘와 사무라이들의 거주지인 부케지(武家地), 상인과 서민들의 거주지인 초닌지(町人地), 신사와 사찰이 입지한 지사지(寺社地) 등 삼원적 공간구성을 띤다. 그 근대적 재편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이 공공용지인 옛 성(城)의 부지와 부케지의 활용이었다(김백영, 2006). 우선 공공용지가 되어버린 성 부지는 성벽은 파괴하고 해자는 매립해 지방관청 용지나 군용지로 전환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sup>10)</sup> 성 부지뿐만 아니라 바쿠후로부터 다이묘들에게 배령(拜領)된 상당량의 토지를 메이지정부가 몰수해 지방도시의 중앙집권적 재편에 유용한 토지스톡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구 부케지 지역은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다.

메이지정부는 도쿄를 비롯한 각 지방 행정중심 도시들의 핵심 토지를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전국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국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각 지역의 공간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수도 도쿄의 도시공간이 권력의 상징적 현시를 주된 논리로 해서 조성된 반면, 지방도시에서의 도시공간은 중앙권력의 지방 장악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권력, 즉 군사력의 거점지로서 최우선적으로 활용되었다. 주둔군을 중심으로 도시의 근대화가 시작된 이른바 ‘군도(軍都)’의 경우 구 조카마치 지역 내에 군대가 주둔하고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은 구 성곽에 사단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이 전형적이었다(本康宏史, 2002). 이처럼 메이지 지방도시의 도심부 토지스톡은 중앙권력의 통치전략에 따라 자의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각 지방도시를 중앙정부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 특화해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 권력수단으로 작용했다.

## 2) 일본형 식민지 도시의 원형 분석

그렇다면 일제가 그들의 식민지 도시에서 실현하고자 한 공간적 질서는 어떤 특성을 띠는가? 그들이 건설한 식민지 도시의 사례 가운데 어떤 공간적 원형(prototype)을 추출해낼 수 있는가? 일제 식민지 도시의 원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는 1873년경 홋카이도(北海道) 전체를 관할하

10) 메이지 6년(1873) 1월 14일 태정관(太政官) 포고에 의해 도쿄조(東京城) 등 43개의 성과 1개 요해(要害)는 존속이 결정된 한편, 14개 성, 19개 요해, 126개 진대(陣臺)는 폐성이 결정되었다. 폐성은 대장성으로 이관되어 입찰 및 불하가 행해졌고 이후 전국 대부분의 성은 군용지로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2차 세계대전 패전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밖에 때로는 학교용지로 사용하거나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존해 공원화하거나 유적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는 식민지 도시로 건설된 삿포로(札幌)이다. 삿포로는 같은 시기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오키나와(沖縄)의 중심도시 나하(那覇)의 건설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의 ‘구관온존(舊慣溫存)’ 정책<sup>11)</sup>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일본 지배권력의 식민지 도시 건설계획은 아무런 자연적·사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원형 그대로 구현되었다. 도착 아이누들에게서 강탈한 이 백지상태의 공간에 실현된 계획은 상당 부분 바쿠후시대 조카마치 도시계획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었다.<sup>12)</sup>

삿포로의 사례에서 우리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상징으로서 식민지 도시에 거의 예외 없이 이식되는 공통된 두 가지 공간적 요소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와 유곽이다(橋谷弘, 1993: 228~230). 일본에서 유곽문화는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으며, 특히 근세 조카마치에서 유곽은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 신사 역시 식민지 도시에 있어 일본인 사회의 정신적 통합의 핵이자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서, 구미인 커뮤니티의 교회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신성한 장소로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靑井哲人, 2000).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대체로 군부가 일제 식민권력의 핵심적 주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초창기 일본 식민주의의 본래적 목적이 군사적 방어—‘생명선’의 확보—에 있었다는 점과 일본제국의 대

11) 일본은 1879년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워 나하에 오키나와현청을 설치했으나 이는 구 류큐(琉球)왕국 지배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메이지 정부는 류큐 시기의 지방행정 및 토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인두세(人頭稅)와 중세(重稅)도 그대로 실시했다. 오키나와에서의 구관온존 정책에 대해서는 田港朝昭(1976) 참조.

12) 삿포로의 도시 건설을 주도한 사람은 개척판관(開拓判官) 시마 요시타케(島義勇)였다. 삿포로의 공간적 특징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보자면, 첫째, 전통적인 60×60칸(間)의 정방형 블록에 따른 규칙적인 격자형 가로망, 둘째, 구 초년지에 해당하는 남쪽의 상업지구와 구 부케지에 해당하는 북쪽의 행정·교육·공공지구로 양분된 공간적 구성, 셋째, 두 영역을 가르는 광대한 대로(이 공간은 오늘날 매년 2월 초의 눈축제(雪祭り)로 유명한 오오도리(大通り)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및 이 대로의 양쪽 끝에 위치한 군주둔지와 신사(구 지사지)로 요약된다(佐藤信·吉田伸之(編), 2001: 359~362; Sorenson, 2002: 79).

륙팽창주의를 주동하고 선도한 세력이 군대였다는 점, 그리고 특히 1930년대 이후 일본제국의 실권을 장악한 세력이 군부였다는 삼중의 의미에서 명백한 특질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도시의 개발·운영을 위한 계획과 실천에서 자본주의적 합리성과 계산 가능성보다는 군부의 비현실적 이상주의가 관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정책의 단기적인 집행은 효율성을 띤 반면, 장기적인 계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결과적으로 구상과 실행의 괴리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일제 식민권력의 군부 주도적 성격은 폭력성과 독단성, 비현실성과 돌발성으로, 언제나 일제 식민통치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고 지배전략에 심각한 동요를 야기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결국 일제의 식민지 도시 건설전략은 그들이 서양 문명의 모방과 고유한 전통의 변용이라는 두 가지 모순적 경향을 융합해 창출해낸 독특한 일본적 근대의 공간적 원형을 식민지 공간에 이식해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민지에서의 건설전략이 본국에서보다 강한 저항과 반발에 봉착한 것은 조카마치의 전통적·구조적 요인의 결여, 유곽이나 신사와 같은 문화적 요소의 이질성, 군부권력의 강압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대다수 피식민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질적이고 낯선 공간적·문화적 요소들의 강압적 이식과 이로 인해 친숙하고 오래된 전통적 생활환경이 순식간에 탈바꿈되는 현상이 단순히 불편한 문화적 경험을 넘어 경악스러운 폭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삶에 닥쳐온 침탈과 재앙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역으로 식민권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피식민 토착사회의 반감과 저항은 피해갈 수만 있다면 모면하고 싶은 걸끄러운 요인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식민 사회가 집합적으로 경험한 외래 식민지들에 의한 전통에 대한 무분별한 파괴 행위는 본래적으로 계획되고 의도된 전략적 행위라기보다는, 식민지 공간에 그들의 문화적 원형을 급속하게 이식하는 과정에서 봉착한 예기치 않은 변수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적 대응

의 산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결국 ‘토착 전통의 파괴와 말살’이라는 피식민 사회의 집합적 경험은 ‘문화적 원형의 이식’이라는 제국주의적 의도가 식민주의적 실천을 통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확대 재생산된 군사적·폭력적 실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원형의 이식과 전통의 파괴 양자 간의 간극에 놓인 긴장과 모순의 전개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 4. 기념비적 상징건축의 건설전략: 지배권력과 시각효과

일제 식민권력이 경성에 건설한 주요한 상징건축의 입지와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주요 건축물들이 건립되는 역사적 정황과 맥락에 대한 더욱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지면 관계상 문제의 핵심에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자면, 필자는 당시 식민권력이 총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식민지 시기의 양대 기념비적 상징건축인 경복궁의 총독부 신청사와 남산의 조선신궁의 건설 과정을 해명하는 것이 식민지 수도 경성의 공간 재편전략을 이해하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이는 다음 두 가지 판단에 근거한다. 우선 공사비나 소요기간, 공사규모 등의 면에서 볼 때 총독부 청사는 공사비 600여만 원, 조선신궁은 공사비 156여만 원이 소요된, 당시로서는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거금을 투여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에 있어서도 후보지 선정 등의 준비기간에서부터 따지자면 각각 약 15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 미증유의 국가적 대사업이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총독부 신청사 건설과 조선신사 조영은 병합 직후 총독부가 추진한 양대 사업으로서, 양자를 하나로 묶어 동시에 검토했다는 점이다.<sup>13)</sup> 따라서 이 두 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식민화 초기 식민지

13) 조선총독부는 1912년 예산에 ‘조선 신사급 총독부 청사 신영 조사비(朝鮮神社及總督府廳舍新營調査費)’로 3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결과 총독부 신청사는 이미 1912년에 경복궁으로 입지와 건설계획이 결정되었고, 조선신궁은 이를 염

수도 건설계획의 핵심적 마스터플랜으로 더욱 주의 깊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제 관건이 되는 식민지 수도 경성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인 조선총독부, 조선신궁, 경성부 청사를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수도 건설 마스터플랜의 개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

광화문거리의 총독부 신청사 건물은 그 위치와 외관에서 일제 식민권력의 위압성이 한눈에 드러나는 식민지 총독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었다. 따라서 피식민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왕조의 정궁(正宮)을 훼손하고 서울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들어선 육중한 총독부 청사에 대한 불쾌감과 적대감, 수치심과 모독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총독부 건물을 비롯한 일제의 도시공간 변용을 통해서 당시 식민권력의 도시공간 재편 전략을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피식민자의 입장 또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과 감수성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인 시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총독부 신축 부지가 결정되던 시점의 경복궁의 상태 및 당시 정황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식민권력이 왕조권력의 상징건축 및 거점 공간을 어떻게 간주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의 개국 이래 왕조의 상징공간으로 자리 매김되어온 경복궁은 식민화 과정에서 총독부 권력에 의한 의도적인 극심한 파괴의 대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볼 때 이

---

두에 두면서 1913~1915년간의 후보지 검토 끝에 일단 왜성대공원(경성신사) 일대로 결정되었다. 총독부 청사는 1915년 공진회의 경복궁 개축을 신호탄으로 해서 1916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진 반면, 조선신궁의 진좌지(鎮座地) 선정은 왜성대의 일본인 거류민들의 비협조로 신축 부지의 확보가 난항을 겪자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1916~1918년에 걸쳐 경성 전역의 후보지 7~8개에 대한 추가 검토 끝에 남산의 한양공원으로 최종 선정된다.

러한 통념적 인식은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경복궁은 1896년 고종의 이관파천 이래 비어 있었으며, 경운궁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각들을 뜯어 옮기고 그 이후로 아무런 공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궁이 되어 있었다. 1900년경 서양인 선교사나 외교관 등이 촬영한 사진자료들을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산짐승들이 내려와 어슬렁거리는 황폐하고 적막한 궁전의 상태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경복궁은 성 내의 공간적 배치상 누가 보더라도 정궁의 위치에 입지해 있었으므로 일제 식민권력의 입장에서는 이 궁궐을 폐허로 방치해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sup>14)</sup>은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에서 강제 폐위된 직후부터였는데, 이후 이곳을 일본인 권력층들의 만찬장으로 활용하거나<sup>15)</sup> 일반인들에게 경복궁을 관람하도록 허용하기도 했다.<sup>16)</sup> 이처럼 경복궁은 병합 이전부터 창경원과 마찬가지로 주로 일본인 권력자들에게 일종의 고궁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므로 수리해 보존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했는데,<sup>17)</sup> 총독부 신청사의 건설부지가 경복궁으로 결정된 것은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sup>18)</sup> 경복궁은 1913년부터는 무료관람이 허용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는데,<sup>19)</sup> 그 이후에도 가끔 총독부 고관들의 만찬 등의 행사장소로 쓰이다가<sup>20)</sup> 1915년의 조선물산공진회 개최장소로 결정되면서

14) 일본에서 건너온 귀빈 관광객들이 경복궁을 유람했다(《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7년 10월 19일자).

15) 주로 풍치가 좋은 경회루가 만찬장으로 활용되었다(《황성신문(皇城新聞)》, 1908년 8월 4일자).

16) 《황성신문》, 1908년 11월 27일자.

17) “경복궁 修理”,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4일자; “경복궁 보관방법”, 《매일신보(每日申報)》, 1911년 5월 31일자.

18) 『總督府廳舍新營誌』(《朝鮮と建築》)에 따르면 1912년에 결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 《매일신보》, 1913년 10월 8일자.

20) 《매일신보》, 1913년 10월 29일자.

내부 공간이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철거되었다. 말하자면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입지가 경복궁으로 결정된 이유는 경복궁이 왕조권력의 정궁이어서 이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과거 한때 정궁이었으나 지금은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방치된 도심부의 방대한 토지 스톡을 활용하는 것이 식민권력에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인 부지 확보의 방편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2) 조선신궁의 입지 선정 문제

조선신궁은 제신의 선정, 입지 선정, 설계와 시공까지도 조선인의 동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조선신궁의 입지 선정과 설계·시공의 총책임 맡은 당대 일본 신사건축의 대표자인 이토 슈타(伊藤忠太)의 강연문에 따르면, 그는 식민지에 신사를 건립할 때에는 일본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식민지에 걸맞은 방식으로 할 것을 주장해 조선식을 가미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미국을 병합하면 미국식을, 인도를 병합하면 인도식을 가미해야 한다’는 것으로, 신사건축이 피식민 대중의 동화를 목적으로 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21)</sup>

조선신궁의 진좌지 선정은 모두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912~1915년 간 이루어진 제1차 진좌지 선정에서 우선 부지를 경성으로 할 것은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경성이 ‘메이지 성대(明治聖代) 이래 조선과 일본의 교섭관계의 중심지’이자 ‘통감부 설치 이래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이었다. 경성 시내에서 배면에 산을 등지고 지대가 넓고 조망이 좋은 곳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후보지로는 남산록 왜성대의 10만 평과 경복궁 뒤 북악산록의 10만 평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특히 후자는 남향의 이점이 있었는데도 참배로 건설이 곤란한 점이 최대의 결함으로 지적되어 탈락되었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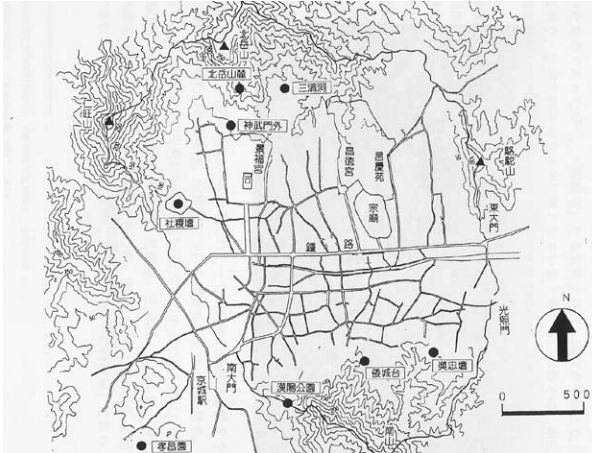
21) 伊藤忠太, 「神社建築に對する考察」, 『朝鮮と建築』, 5-1(1926년 1월), pp. 3~19 참조.

반면 왜성대는 남향이 아니라 완전 북향이라는 점이 입지상의 최대 약점이었지만 개항기 이래 일본인들의 본거지라는 기념비적 장소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채택되었다.<sup>23)</sup> 왜성대의 경성신사는 1913년까지 대신궁으로 불리며 ‘남산대신궁’이라 속칭되었는데, 거류민에 의해 건립되고 유지된 신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sup>24)</sup> 국폐신사 조선신궁은 바로 이 경성신사와 그 일대의 왜성대공원 부지를 활용해 신축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제1차 진좌지 선정의 결론이었다. 진좌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조사비는 이후 1915년까지 계속 계상되는데, 이 기간 동안 총독부는 내지 주요 관국폐사의 시찰, 재목의 단가 및 운반비 또는 대공직인(大工職人)의 고용에 대한 조사, 신사부지의 선정, 참배로 및 경내의 배치에 대한 설계 등을 실행했다. 그런데 왜성대 주변의 일본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로 신축 사업이 부지확보 작업에서부터 난항을 겪게 되자 결국 제1차 선정 과정을 모두 백지화하고 후보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게 된다.

- 
- 22) 당시 경복궁은 이미 1912년에 총독부의 신축 이전지로 결정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신궁 부지가 북악산록으로 결정되었다면 신사와 시가지 및 총독부의 연결을 위해 경복궁 및 그 주변부 일대의 대대적 개조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1차 선정지는 남촌 왜성대공원, 2차 선정지는 남산 한양공원이 되어 조선신궁이 남촌 일본인들의 본거지에 위치하게 되었지만 적어도 선정 과정에서 북악산록이 최종 후보지로까지 고려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초창기 총독부 수뇌부 권력자들이 무모할 정도의 무차별적 동화주의를 상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총독부를 경복궁에 두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조선신궁까지도 한양의 전통적 명당지인 북악산 남록에 둘 것을 고려했다는 것은 식민화 초기 권력 수뇌부의 도시공간 운용 전략이 종로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략’해 도시공간을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3) 본정에서 왜성대로 이르는 참배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靑井哲人(2000: 200~202) 참조.
- 24) 1898년 11월 3일 창건되어 1902년에는 경내 동쪽에 천만궁(天滿宮)이 설치되고 1903년 거류지에 간이수도 부설을 위해 신사 바로 아래쪽에 저수지를 만들면서 진입로에 ‘신교(神橋)’가 놓였다. 남산대신궁은 1913년 경성신사로 개칭되었고, 1916년 5월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에 의해 경성시민의 씨신(氏神)을 모시는 신사로 인가되었다.



<그림 1> 1916~1918년간 검토된 조선신궁 후보지 위치도



자료: 五島寧(1996).

조선신궁의 완공을 앞두고 진좌지 선정 과정을 언급한 당시 《조선과 건축》의 기사를 보면, “반도(半島) 1천7백만민의 수호신인 관폐대사 조선신궁은 실로 야마가타(山縣) 정무총감 시대 이토 슈타(伊東忠太) 박사가 10개소의 후보지로부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그 결과 경룡(京龍)의 중심지로서 경승유거(景勝幽遽)의 지(地)인 남산 중복(中腹)을 신역(神域)으로 선택”<sup>25)</sup>하게 되었다고 제2차 부지 선정 경위를 밝히고 있다. 《조선신궁조영지(朝鮮神宮造營誌)》를 보면 구체적 후보지로 한양공원, 왜성대, 장충단, 효창원, 사직단, 삼청동, 북악산록, 경복궁 뒤편 신무문밖 등 8개소를 들고 있다(<그림 1> 참조). 당시 조선신궁의 제2차 진좌지 선정 과정의 책임자였던 이토 슈타가 후보지 평가과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남긴 자료인 『伊東忠太舊藏資料』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다음 12가지였다.<sup>26)</sup>

25) 『最近朝鮮建築界』, 『朝鮮と建築』, 4~11(1925년 11월), p. 47.

26) 이하의 내용은 靑井哲人(2000: 204~209)의 내용을 재인용·정리했다. 이 글에서는 각 후보지별 평가항목의 배점과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되고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 ① 제신(祭神)과 관계가 있는 곳, 조금이라도 불상불결(不祥不潔)하지 않은 곳
- ② 공간이 광활해 군중이 모이기에 충분할 것
- ③ 울창한 수림(樹林)을 가진 곳, 특히 배경으로 수림이 우거진 곳
- ④ 약간 고지대에 위치할 것
- ⑤ 되도록 남향으로 할 것
- ⑥ 되도록 맑은 물이 흐르는 곳
- ⑦ 시가지의 번잡한 거리와는 격리된 곳
- ⑧ 시가로부터의 교통이 가능한 곳, 특히 넓은 참배로가 있는 곳
- ⑨ 주위에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을 것
- ⑩ 시가로부터 화재의 우려가 있는 풍향을 피할 것
- ⑪ ‘아스펙트’가 좋을 것(외관)
- ⑫ ‘프로스펙트’가 좋을 것(경내로부터 사방의 조망이 좋을 것)

이러한 평가항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신궁의 입지 선정은 풍수적 원리나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장소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이 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수려하고 조망이 좋은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여기에서 필자는 조선신궁의 신축에 의한 남산의 변용과 관련해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는 당시 남산이 공원이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남산이 국사당과 같은 조선 고유의 민간신앙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우선 당시 일본인들의 거주지였던 남촌의 배후지인 남산은 경성에서 가장 경관이 잘 가꾸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심부에 위치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공원이었다. 경성의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1917년 경성부에서 임학박사 혼다(本多靜六) 교수를 본국에서 초빙해 남산을 일주하고 지문을 구했는데, 그는 남산의 규모가 광대해 진보한 설계를 하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다면 동양에 우수한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해 폭포와 동물원, 시습농장, 20리의 자동차 주회도로 등을 만들 것을 주장

했다.<sup>27)</sup> 혼다의 선구적 주장을 계기로 이후 남산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총독부는 부족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투자하기는커녕 결국 당시 서울에서 가장 조망이 빼어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한양공원 일대의 광대한 부지를 국폐신사 용지로 할애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사당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조선인들의 정치적 반응을 두려워해 이를 이전·존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총독부 권력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하나는 그것이 피식민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재조선 일본인들에게도 ‘군림’하는 — 시민의 공익을 무시하는 — 군국주의적 독재 권력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시대의 전통적 장소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조선인들로부터 불필요한 민족적 적대감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신궁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조선총독부가 남산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산에 조선신궁을 건립했다는 속설이 사실에서 얼마나 거리가 먼지 분명히 알 수 있다.

### 3) 경성부 신청사 건설과 도심부 경관 정비

이제 덕수궁 앞 경성부 청사의 입지 선정 과정을 살펴보겠다. 경성부 청사 신축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던 1923년 당시의 정황으로부터 추론해보건대, 경성부청이 덕수궁을 감시하거나 심지어는 ‘그 지기(地氣)를 누르기 위해 덕수궁 앞에 건설되었다’는 속설(정운현, 1995: 170~171)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덕수궁 앞에 경성부청이 신축된 것은 ‘덕수궁’으로 표상되어온 감시와 경계의 대상(고종)이 사실상 사라진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27) “대공원의 계획”(《매일신보》, 1917년 1월 5일자) 및 “남산을 동양의 대공원 되게 하라”(《매일신보》, 1917년 1월 9~11일자) 연재기사 참조.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sup>28)</sup> 이듬해인 1920년 1월, 일년제를 거행한 후 ‘주인 잃은’ 덕수궁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되었다.<sup>29)</sup> 창덕궁으로 어조영(御照影)을 봉안(奉安)한 이후<sup>30)</sup> 논란을 거듭하다가 일단은 보존하기로 결론을 맺었는데,<sup>31)</sup> 이는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총독부의 정치적 고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23년 경성부청의 이전 후보지가 논란이 되었을 때 덕수궁이 그 후보지에 올랐던 것은 고종 사후에야 덕수궁이 식민권력이 비교적 큰 정치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스톡이 되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을 직접 훼손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에 망설여졌을 것이다. 그 결과, 처음에는 경성부협의회 결의에 따라 남대문 옆 남대문소학교 부지로 결정되었다가 부청이 지나치게 남쪽으로 치우치는 데 대한 조선인 유력자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마침 경성일보 사옥이 화재(1923)로 훼손된 것을 기회로 총독부가 나서 경성일보사와의 교섭을 통해 사옥 부지를 양도받아 오늘날의 덕수궁 앞 경성부 청사가 출현하게 되었다.

태평통의 경성부 신청사는 그것이 처음 계획되기 시작한 시점(1923년)이 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시기였다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광화문통의 총독부 신청사와 연계된 공간적 기획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혼마찌(本町)를 중심으로 남촌에만 집중되어 있던 일본

28) 당시 고종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독살설’이 시중에 파다하게 퍼졌다. 3·1운동이 3월 3일 거행 예정이던 고종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 의해 전개되고 확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9) “御一年祭 舉行後の 德壽宮의 處分問題”, 《매일신보》, 1920년 1월 19일자.

30) “歷代 大王의 御眞影 昌德宮에 御奉安”, 《매일신보》, 1920년 2월 14일자; 《매일신보》, 1920년 2월 18일자.

31) “德壽宮은 保存”, 《매일신보》, 1920년 3월 3일자. 이후 덕수궁은 이왕직 관리하에 이왕가의 임시 거주지로 활용될 뿐이었으므로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물망에 올랐다가 경성일보 사옥 부지로 결정되었다(“三殿下의 起居하옵실 德壽宮 石造殿”, 《매일신보》, 1922년 4월 20일자).

인 세력이 본격적으로 북촌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이 되었음은 물론, 해방 이후까지 지속된 정치·행정 중심과 상업·금융 중심이 공간적으로 분화된 계기로도 자리 매김 된다. 광화문통과 태평통을 장악함으로써 그동안 낙후된 채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 주변 북촌의 가로망이 정비되고 경성역·경성부청·경성운동장·경성제국대학 등이 일거에 건설됨으로써 총독부가 병합 초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식민지 행정수도의 도시경관 정비 사업이 일단락되기에 이른 것이다(김백영, 2005: 172~174).

분명한 것은 조선총독부나 조선신궁, 경성부 청사의 입지 선정에서 조선왕조의 전통적 공간질서—풍수와 주례, 왕조적 상징—는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입지 선정 및 건축설계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한 요인은 탁 트인 전망(prospect)과 압도적 외관(aspect)이었다. 식민권력이 상징건축을 통한 도시공간의 재편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전통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지배의 물질적 장치의 시각적·공간적 효과였다. 굳이 말하자면 그들이 의도한 것은 풍수적 질서나 ‘대일본(大日本)’의 각인이 아니라 경성부의 오스망화(Haussmannization)였던 것이다.

## 5. 식민지배와 공간정치: 선택과 배제의 논리

이제 마지막 문제, 일제가 한반도 전통건축의 유산에 대해 취한 태도는 어떤 특성을 띠는지 탐문할 차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내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일제가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침탈과 훼손과 파괴행위가 우리 문화재에 얼마나 큰 해악과 재앙을 초래했는가를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필자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민족말살’ 정책으로 단선적으로 환원하는 통념적 인식을 비판하면서 일제 식민권력의 문화적 실천에 대한 정치적 독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이 절에서는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건축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통건축에 대한 일제의 선택과 배제의 전략과 그 식민주의적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 1) 전통왕조 상징공간의 파괴와 변용

총독부는 조선왕조의 상징건축을 어떻게 간주했는가? 일반적으로 전통공간에 대한 일제의 무수한 파괴와 침탈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 사례로 드는 것이 경복궁에 대한 훼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0년대 경복궁은 이미 왕조의 상징과는 거리가 먼 황폐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초기(무단통치기) 식민권력의 일방적 폭력성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1897년(광무원년)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대한제국의 성지인 환구단에 대한 일제의 파괴 공작은 병합 직후 식민지 무단권력의 전횡이 극에 달했음을 증언한다. 환구단은 1909년 토관제조장(土管製造場)을 설치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해 1914년에는 환구단을 완전히 헐어내고 철도호텔인 조선포텔이 건립되어 호텔 뒤뜰에 황궁우만 남겨지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창경궁(昌慶宮)의 개조 공작은 1909년부터 시작되어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건설되었다. 병합 이후인 1911년에 이르러서는 일반인에게도 관람료를 받아 공개되고 명칭도 창경원(昌慶苑)으로 격하되었다.

전통건축의 유산들이 이처럼 식민지기에 무차별적으로 훼손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총독부의 공식적 방침 또는 일관된 전략에 따른 것은 아니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동화주의를 표방한 통치전략상 총독부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조선 전래의 고적유물, 특히 고건축물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sup>32)</sup> 당시 일본의 대표적 건축가 중 한 사람인 동경제대 출신 건축가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통감부 촉탁으로 1908~1909년간 한반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적유물을 조사·감정·

32) “논설: 고건축물 보호”, 《매일신보》, 1911년 10월 6일자; 「古物 보존의 필요」, 《매일신보》, 1912년 12월 25일자.

평가한 것은 이러한 식민권력의 방침 때문이었다.<sup>33)</sup> 세키노 작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리엔탈리즘적 편견과 식민지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제국주의적 멸시의 시선에 있었다. 그의 연구는 식민지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사실상 고려시대 이전의 건축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통 건축물들, 특히 조선시대 건축물들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절하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러한 식민주의적 기준에 입각할 때 당시 대원군에 의해 중건된 경복궁이 역사적 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처럼 총독부의 조선왕조 건축유산에 대한 야만적 파괴행위는 적어도 식민지 조선의 ‘고건축 보호’라는 명분과 지침하에 자행된 것이다.

조선왕조가 유산으로 남긴 5개의 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가운데 병합 이후에도 왕궁으로 명맥이나마 유지한 궁궐은 덕수궁과 창덕궁 2개였다. 이들 궁궐은 경성의 도심부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은 흔치 않은 공간이었는데, 이는 사라져버린 조선왕조(및 대한제국)의 현존하는 왕의 거처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었다. 고종과 순종의 인산일을 전후해 발발한 3·1운동과 6·10만세운동이 잘 보여주듯이 아직도 왕조의 향수를 추억하는 대중에게 왕의 존재는 강력한 정치적 동원의 구심력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늘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병합 이후에도 총독부 권력은 덕수궁과 창덕궁에 대해 한편으로는 일종의 정치적 불모이자 정치적 안전판으로 국왕에 대한 예를 다하는 듯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왕과 그 주변 인물들의 동태에 대한 면밀한 감시의 시선과 통제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1907년 통감부 권력에 의해 ‘덕수궁 이태왕’(고종)이 사실상 궁 안에 유폐된 이래 덕수궁에 대한 외부인들의 출입은 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의 신문자료를 통해서 보건대, 덕수궁에서는 순종이 때때로

33) 세키노는 병합 이후에도 총독부 촉탁으로 한반도 곳곳을 답사하면서 조선의 고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는 대체로 400~500년 이상 된 오래된 건축물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문안을 오고 연례행사인 고종의 탄신연(誕辰宴)이나 신년연(新年宴), 그밖의 연회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총독부가 왕실에 대한 대우를 연출했을 뿐 고종은 자유로운 활동이나 외부인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사실상 영어(圜圖)의 상태였다. 특히 1915년에는 파출소가 설치되어<sup>34)</sup> 감시상태에 놓여 있었다. 창덕궁의 경우에도 1907년 10월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어한 이래<sup>35)</sup> 총독부 권력은 시간을 정해 일반인들의 관람을 허가하는 한편, 창덕궁경찰서를 설치해 왕의 동태를 감시했다.<sup>36)</sup> 한편 이곳은 연례행사인 신년연과 매주 목요일 거행되는 정기적 오찬회의 장소가 되었다.<sup>37)</sup>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보수공사를 해서 궁궐의 시설을 갖추고<sup>38)</sup> 1920년 초에는 역대왕의 어진영(御眞影)을 덕수궁에서 옮겨와 봉안하고<sup>39)</sup> 대조전을 새로 짓는 등 궁궐을 단장해<sup>40)</sup> 뒤늦게 왕조의 맥을 잇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궁궐로서의 면모를 재정비했다.

1919년 ‘덕수궁 이태왕(德壽宮李太王, 고종)’의 죽음에 의해 촉발된 3·1 운동에 이어 1926년 ‘창덕궁 이왕(昌德宮李王, 순종)’의 죽음으로 6·10만세 운동이 전개된 것을 마지막으로 왕조적 전통을 대중 동원의 상징적 구심으로 하는 ‘저항 이벤트’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국왕의 신체가 소멸됨과 함께 전통왕조의 상징적 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써 경성의 도시공간에 산재해 있던 모든 ‘성역’은 사라지게 되었다. 경복궁의 운명

34) “德壽宮內 昌德宮警察署 德壽宮派出所 設置”, 《관보》, 1915년 5월 29일자.

35) “昌德宮 移御”,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9일자; 《황성신문》, 1907년 10월 9일자.

36) “昌德宮 正門開閉 通行制限”, 《관보》, 1908년 4월 2일자; “昌德宮 正門開閉 通行制限中 改正件”, 《관보》, 1909년 1월 23일자.

37) 고종황제 사망 이후 매주 정기적 행사로 정착되었던 ‘창덕궁 목요오찬’은 점차 흐지부지되어 1923년경에 이르러 ‘영폐(永廢)가 될는지 부활(復活)이 될는지’ 하는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매일신보》, 1923년 11월 6일자 기사 참조.

38) “二期工事が 完成된 昌德宮”, 《매일신보》, 1919년 8월 24일자.

39) “歷代 大王의 御眞影 昌德宮에 御奉安”, 《매일신보》, 1920년 2월 14일자.

40) 《조선일보》, 1920년 6월 15일자; 1921년 2월 2일자.



이 그러했듯이 이제 식민권력이 식민지 수도 도심부의 노른자위 땅을 의미 없이 방치해둘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국왕의 신체 소멸이 식민권력에 의해 곧바로 도시공간의 변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무단정치기 식민권력은 조선왕조의 지배세력과 전통적 권위의 상징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 존중을 보여주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로 남겨둔 덕수궁과 창덕궁(각각 고종과 순종의 거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왕조의 상징공간들을 몰수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처분·활용했다. 그 양상은 앞서 언급한 메이지 초기 일본의 도시 건설(수도 도쿄의 건설 및 지방 행정중심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조카마치의 부케지가 공적 용도의 토지스톡으로 활용된 방식과 흡사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왕조공간의 상징성을 의식한 의도적이고도 치밀한 파괴공작의 산물이라거나 전통과 상징의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주도면밀한 정책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초기 군부권력의 식민도시화 전략이 임기응변의 무원칙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근대주의적 실천의 식민주의적 효과

지금까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총독부가 식민권력의 상징공간을 창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의 전통 공간을 훼손했다고 역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풍수이든 토속신앙이든 총독부 입장에서 파괴와 보존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그것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였다. 이 점에서 사태는 역설적이다. 한편으로는 식민지 현지의 문화적 전통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민권력은 본래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예기치 않은 문화적 저항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식민권력은 통치의 정당성이 결여된 외래 권력집단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공간의 파괴적 변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

면도 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함수관계를 고려해볼 때 식민권력은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본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복궁 신청사과 남산 조선신궁의 건립 과정에서 철거하려고 했던 광화문과 국사당을 이전시켜 보존한 것은 이러한 식민통치에서의 지배와 저항의 함수관계에 따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창덕궁-종묘 관통도로(현 울곡로) 건설이다. 이 노선은 경복궁의 총독부 청사와 경성제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미 1919년 시구개수노선 발표 때 포함되어 있었으나 ‘창덕궁 이왕’(순종)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공사 시행을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1926년 순종이 승하하자<sup>41)</sup> 1927년 연초에 곧바로 창덕궁과 종묘의 경계선을 뚫는 신작로 공사설이 제기되었는데,<sup>42)</sup> 이는 식민권력이 고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종에 대해서도 몰락한 왕조의 국왕이 갖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당시 공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총독부 앞에서 돈화문 앞을 통해 종묘와 창덕궁의 사이를 관통해 대학 앞으로 가는 대도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내가 설계시공의 책임을 지고 있던 도로인데, 그 공사를 할 때 상당히 물의를 빚었다.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창덕궁에서 종묘로 가는 통로가 없어진다. 창덕궁의 뒷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산의 맥을 단절하게 되므로 그곳에 도로를 놓는 것에 대해 李王家가 반대했다고 한다. 전주 이씨로 불리는 양반들이 전주 인근에

41) 순종의 장례식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昌德宮의 尊嚴과 조선귀족의 체면문제”(《매일신보》, 1926년 5월 12일자) 기사 참조. 순종 사후 창덕궁은 일본에서 돌아온 덕혜옹주의 거처가 되어 이왕가의 마지막 궁궐로서의 명색을 유지해갔다. “경성역에 착어하신 덕혜옹주”, 《조선일보》, 1927년 4월 12일자; “홀로 남으신 德惠翁主 今年 여름은 昌德宮에서”, 《매일신보》, 1927년 6월 7일자 참조.

42) “昌德宮과 宗廟 境界線에 新作路”, 《매일신보》, 1927년 1월 10일자.

서부터 다수 몰려와서 산의 맥을 끊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큰 소동을 일으켰다. 사이트 총독이 이를 듣고는 이렇게 성가신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 그만두라고 말했다. 그러나 …… 나는 일단 결정된 일은 단연 해낼 작정으로 李王職의 篠田次官과 여러 가지 상담을 했다. 그는 상관 말고 하면 된다고 했으나 총독이 몇 번씩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篠田次官이 李王전하(현재의 李垠씨)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는 전주 이씨들의 이야기를 이상하다고 하면서 도시계획 전체를 볼 때 그곳에 도로가 하나 생기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이트 총독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기뻐하면서 이제 공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 이것은 하나의 예로서, 도시계획의 실시는 분묘, 고적 등이 있어 문제가 많아서 상당히 용이하지 않았다.”(本間德雄, 1987: 66~67)

이처럼 이 공사는 심지어 순종 사망 이후에도 전주 이씨들의 반대로 인해 착공이 연기되다가 구름다리를 놓는 조건으로 어렵게 공사가 이루어졌다. 1929~1930년간 이 도로가 완성됨으로써 마침내 경성부 도심부 격자형 간선도로 체계가 완성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도로의 건설을 통속적인 일제 단맥설의 논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 시기 총독부는 도로 건설이라는 근대주의적 실천이 식민지 사회에서 야기하는,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사회적 효과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 가급적 회피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결론: 집합기억의 탈식민화와 민족적 장소성의 발명

일제는 조선왕조의 전통공간에 대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전유·변용을 가했다. 창경궁을 공원화해 개방하고 경희궁을 거류민들의 학교부지로 전용하며, 경복궁을 주요 박람회 개최공간으로 활용하고 총독부를 신축·이전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총독부 권력이 전통권력에 대한 상징정치적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 보존·관리한 것은 고종의 거처인 덕수궁과 순종의 거처인 창덕궁 등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통공간에 대한 파괴가 풍수적 단맥설이나 민족전통의 말살과 같은 어떤 일관된 파괴의 원칙이나 전략에 따라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그것은 식민지 수도 도시공간 변용의 상황적 필요에 따라 실행된 임기응변적 조치의 산물이었다. 식민통치의 전 시기를 통틀어 역사도시의 공간적 전통의 관성과 저항은 강력하고 지속적이었다. 식민권력은 강력한 동화주의적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도시 개발을 강행할 만한 경제적 자원도, 정책적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일제 식민권력은 조선의 전통 풍수의 효용을 믿고 정책적 실행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아둔하거나 야만적이지 않았고 한반도 산하 곳곳의 명당을 찾아내어 혈맥을 끊고 민족정기를 누를 만큼 주도면밀하거나 전지적 권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이제 서두에서 언급한 일제 단맥설의 세 가지 내용으로 되돌아가보자. 첫째, 일제는 식민지 도시에 적용할 그들 고유의 원형적 공간질서를 갖고 있었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한국의 전통적 공간질서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것은 아니었다. 둘째, 경성의 도심부를 장식한 일제의 랜드마크 건축물들의 입지와 형태, 건설 시기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당시 집권세력의 힘과 의지, 재경성 일본인들의 반응, 이왕가와 조선인들의 반응, 그리고 제국 본국의 정치적 상황과 재정적 지원 등의 변수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셋째, 조선의 전통문화를 대한 식민권력의 태도는 시기와 국면에 따라 커다란 진폭을 그리며 동요하고 변화했다. 분명한 것은 식민지기를 통틀어 일본이 우리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침탈하고 훼손한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그것이 모두 식민정부의 계획과 의도의 결과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민족주의는 인접한 강대국인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경쟁심 속에서 성장했다. 강고한 반일 정서와 국수주의의 울타리 속에서

강하지만 악한 일본민족과 약하지만 선한 한민족의 이분법이 고난의 민족사를 그려내는 서사의 기본적 모티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의 확대재생산과 함께 한민족과 양립불가능한 극악무도한 ‘민족말살’의 화신으로 상상된 일제와 그들이 자행한 공간적 침탈과 문화적 파괴에 대한 대중적 반감 속에서 일제 단맥설은 잉태되고 성장해왔다. 집합경험과 집합기억에 정당성의 근거를 둔 거대한 민족사의 상상계 공간의 구축, 그 속에서는 민족의 존립을 말살하려는 그들의 기획과 음모가 거대하고 철저할수록, 그 힘이 강대하고 흉폭할수록, 그들의 의도가 치밀하고 악랄할수록, 그들에 의해 곳곳에 남겨진 끔찍한 흉터와 외상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한반도의 역사·영토·민족, 시간·공간·주체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공지에 찬 삼위일체적 존재로서 시공을 초월한 정당성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민주의의 차별과 폭력이 낳은 현실의 무력감과 자괴감,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대한 상상계에서의 보상과 보복이 초래하는 사회적 역기능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지나치게 무디고 관대한 반응을 보여왔다. 일제 단맥설은 한민족의 존재론적 당위성에 대한 원초적 접근(primordial approach)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것을 더욱 강고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담론적 촉매제가 되어왔다. 더 이상 일제 단맥설을 단순히 학적 비판의 가치조차 없는 저열한 속설로만 치부하고 넘기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부재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구적 집합기억을 만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장소성에 대한 상상의 지리를 통해 또는 전통적 상징공간의 ‘복원’ 또는 ‘발명’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민족적 성소에 대한 재현적 실천의 암묵적인 담론적 근거로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하에 식민지기 경성의 도시공간에 실현된 일제 식민권력의 공간 재편 전략이 이러한 통념적 속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음을 논증하고자 했다. 본고는 그 재편 전략에 의해 창출된 공간적 결과물에 대한 분석에서 대상의 범위가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했고, 분석틀의 구성이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면서 총

분히 세밀하고 정치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했다. 또한 일제 단맥설과 같은 통속적 공간 해석 담론이 어떻게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는다.

❖ Abstract

Modification of Symbolic Spaces and Invention of Collective Memories:  
How the national places in Seoul were reconstructed  
through the colonial experiences?

Kim, Baek-Yung

The demolition of the former headquarter building of Chosen Governor-General in 1995 and the opening of Sodaemun Prison History Hall in 1998 show the existing influence of the collective memories of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on the politics of urban space in contemporary Seoul. One can find out some aspects of the effacement and revival of the collective memories in relation to the destruction and restoration of the symbolic spaces based on strong nationalistic emotions in post-colonial Korean society. Criticising Korean popular version of the theory of geomantic injury by Japanese imperialism, this paper analyses following three main aspects of the restructuring plan of colonial Seoul(Keijo) of Japanese imperialism.

Firstly, Japanese strategies of colonial urbanization can be analysed into two moments: transplantation of the prototype and destruction of the native traditions. Japanese prototype of modern urbanism, including such Japanese original cultural elements as the shrine and the licensed prostitute quarters, is originated from the spatial systems of traditional Joukamachi developed by Bakuhu regime in early modern Japan.

Secondly, the investigation of the process of the building of the two representative symbolic architectures of Japanese colonial power in Keijo, the headquarter building of Governor-General in Kyungbokkung palace site completed in 1926 and the Chosen Shrine built in the Mt. Namsan area in 1925, reveals Chosen Government-General's strategies of the construction/destruction of the symbolic space in colonial Seoul, which can be summarized as an Haussmanizing project, putting emphasis on the visual effects of both the prospects of the location of the

buildings and the aspects of the architectural forms.

Thirdly, the attitudes of the Japanese colonial power towards the traditional architectures of Chosen Dynasty can be characterized as apparent ambiguity, consisting of two contrasting aspects: overall neglect of the value as cultural properties on one hand, and careful considerations on specific objects in particular moments on the other. As results, it can be said that the politics of urban space of the Japanese colonial power proceeded mainly with the lack of fundamental principles, according to circumstances.

The fact that the social spread of the misled popular version of the theory of geomantic injury in post-colonial Korean society can be interpreted as a symptom which reveals the overwhelming influence of Korean people's collective emotions of revenge upon Japanese people in the formation of post-colonial Korean nationalism. It cannot be overemphasized to pay attention to the phenomena of recent rediscovery or invention of national placeness in Korean society, in relation to the social dynamics of the politics of colonial memories and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Korean nationalism.

Keywords: Seoul(Keijo), Symbolic Space, Collective Memory, Colonial Experience,  
National Place



## 참고문헌

- 공보처 편. 『변화와 개혁: 김영삼 정부 국정 5년』 1권. 공보처.
- 김광우. 1990.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 한성부 도시개조사업』. 《향토 서울》, 50.
- 김기빈. 1993. 『600년 서울 땅이름 이야기』. 살림.
- 김기호. 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
- 김대호. 2003.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朝鮮神宮 건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백영. 2003. 『왕조수도로부터 식민도시로: 경성과 도쿄의 시구개정에 대한 비교 연구』. 《韓國學報》, 112. 일지사.
- \_\_\_\_\_. 2005.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6. 『서양의 모방과 전통의 변용: 일본 근대도시 형성과정의 이중적 경향』. 《일본연구논총》, 23.
- 김정동. 1989. 『渡來한 ‘서양인 건축가’에 관한 연구1: 서울에서의 역할과 영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4.
- \_\_\_\_\_. 2000.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 김중현. 1998. 『한국 鐵道驛舍 1899~1945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 통권111호.
- 노자키 미즈히코(野崎充彦). 2000. 『한국의 풍수사들』. 동도원.
- 다카기 히로시(高木博志). 2004. 『일본 미술사와 조선 미술사의 성립』. 임지현·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 다카시 후지타니(Takashi Fujitani). 2003.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한석정 옮김. 이산.
- 박종서. 1998. 『한말 국가제사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9. 『서울건축사』. 서울특별시.
- 손준목. 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일지사.
- 신용하. 1999.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의 건립과 변천』. 《향토 서울》, 59.
- 이성시. 2004. 『조선왕조의 상징공간과 박물관』. 임지현·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 이태진.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 정운현. 1995. 『서울 시내 일제 유산 답사기』. 한울.
-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성윤. 2004. 『대한제국의 의례 재정비와 전통의 창출』. 『전통의 변용과 근대 개혁』. 태학사.
- 최석영. 2002. 『한말~일제강점기 國家祭禮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 허영섭. 1996.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 한울.
- 홍순민. 1999.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 André Sorenson. 2002. *The Making of Urban Japan: Cities and planning from Edo to the twenty-first century*. Routledge.
- Koen De Ceuster. 2000. “The Changing Nature of National Icons in the Seoul Landscap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No. 4.
- 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amlin Hur. 1998. “Collective Memory, Historian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of Koreans Through the Japanes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No. 1.
- 菅浩二. 2004.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臺灣神社と祭神』. 東京: 弘文堂.
- 橋谷弘. 2004.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東京: 吉川弘文館.
- 本間徳雄. 1987. 『朝鮮の土木事業について』. 『友邦シリーズ』第8號: 朝鮮の國土開發事業』. 東京: 友邦協會.
-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戰の記憶』. 東京: 巖南堂書店.
- 五島寧. 1996. 『日本統治下`京城`の都市計劃に關する歴史的研究』. 東京工業大學 博士學位論文.
- 青井哲人. 2000. 『神社造營よりみた日本植民地の環境變容に關する研究: 臺灣・朝鮮を事例として』. 京都大學 博士學位論文.
- 田港朝昭. 1976. 『近代における沖繩』. 『日本歴史』(잡지아닌가요?), 15. 東京: 岩波書店.
- 本康宏史. 2002. 『軍都の慰靈空間: 國民統合と戰死者たち』. 東京: 吉川弘文館.

《관보(官報)》

《매일신보(每日申報)》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황성신문(皇城新聞)》

《조선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朝鮮と建築》